

경제세계화의 한계와 전망: 한국의 선택*

박영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머리말: 경제세계화의 진화

경제의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는 개별 국가들의 상품·서비스·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범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보면 15세기에도 이미 개별 국가 경제가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세계화는 국가 간,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부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진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현대에 와서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와 흐름을 바꾸어 놓는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1945-91년의 세계경제는 서방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된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공산진영에서는 정부의 경제계획에 따라, 서방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의 자유화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왔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범세계적인 경제체제로 자리 잡게 되자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995년 WTO의 출범으로 회원국의 관세가 낮아지고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역의 자유화는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의 물결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금융의 세계화를 가속화하였다.

그 결과 '80년대에 GDP 대비 50%도 되지 않았던 OECD 국가들의 총 외화자산·부채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에는 무려 450%를 육박할 정도로 선진국 간의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신흥 시장 경제의 경우에도 동일 비율이 35%에서 배 이상으로

* 이 논문은 2013년 2월 21일,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 기조연설의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서강대학교의 조윤제 교수와 고려대학교의 이종화, 김진영, 박인원 교수는 초고에 대한 여러 수정제안을 해주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증가하여 금융개방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Lane, 2012).

200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세계화는 경기변동을 완만하게 하여 성장과 안정이 병행하는 Great moderation의 시대를 열었고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경제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강조되면서 범세계적인 경제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여졌다. 한국도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의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면서 세계화는 벽에 부딪치게 된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로부터 회복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과거의 추세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세계화의 후퇴의 원인은 무엇이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 다시 세계화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며, 이러한 전환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2. 세계화의 후퇴와 그 원인

경제의 세계화는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개별국가 경제를 하나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다자간 무역 자유화의 부진과 반전으로 정체에 빠지게 된다(Gregory et al., 2010). 2001년에 시작 된 WTO의 도하라운드에는 시장개방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지 못하여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가 경제세계화에 대한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금융개방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면서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경기 순응적이며 리스크를 도외시하고 단기수익에 집착하는 자산운영에 편향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과열과 과열(Boom-Bust)의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2008년 위기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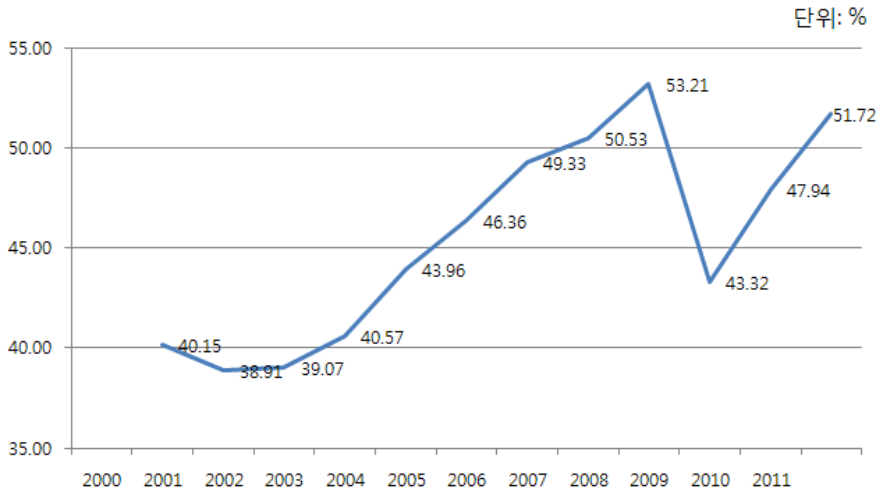
금융위기와 보호무역 확산 이면에는 세계화 후퇴의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통합을 제대로 지원·관리하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기존 세계경제의 지배구조의 결함에 있었다.

1)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부진

과거의 경험을 보면, 금융위기는 대체로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1929년 대공황으로 국제무역 제도가 붕괴하여 세계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경험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도 세계 무역의 규모가 12%나 감소하였으나 일 년 후에는 14%나 증가하는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1930년의 악몽은 재현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무엇보다도 WTO가 어느 정도 방벽으로 작용했고 FTA의 확산과 새로 확대·격상된 G-20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정책이 무역의 위축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 세계무역-GDP 비율



자료: 세계은행(<http://data.worldbank.org/>), 무역협회(<http://stat.kita.net/>).

무역자유화의 후퇴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WTO가 설립된 당시와 비교하면 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의 규정이 적기에 개편되지 않은 관계로 회원국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수입이나 수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즉, 국제무역이 다수의 국가, 기업, 상품을 포함하는 복잡한 조직망을 통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가 증가하면서 여러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물품구입은 자국 제품에 한정할 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UNCTAD,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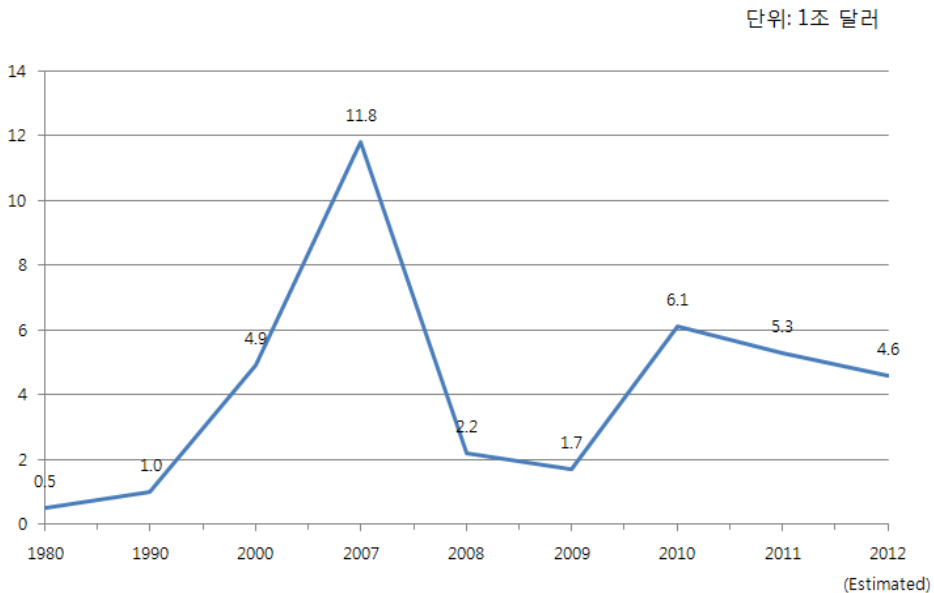
그러나 다자간 무역자유화 후퇴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하라운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에서 앞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있다. 도하라운드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신흥국들의 공산품 시장 개방, 지적소유권 보호 등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부진함에 따라 그동안 양자 간 혹은 복수 국가 간 FTA 혹은 RTA가 양산되어 왔는데, 2013년 1월 현재 RTA의 수는 546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FTA가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디딤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없다. 최근의 동향은 RTA의 증가를 억제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들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로 연결될 수 있는 즉, RTA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aldwin and Low, 2009).

2) 금융시장 통합의 후퇴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후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2012년 현재 2007년 수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국가 간 자본 이동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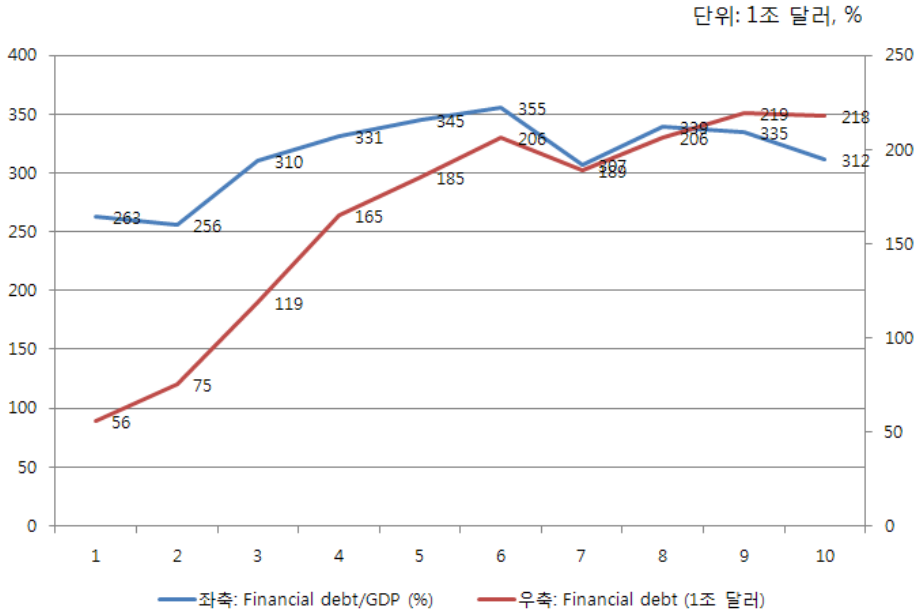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2013.

이처럼 글로벌 금융의 급격한 팽창과 수축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무질서하게 추진되어 온 금융시장의 개방과 통합의 편익을 뒷받침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논의는 대부분 편익보다는 폐해를 훨씬 더 많이 초래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재평가가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공격과 저항의 배경이 되고 있다. 1990년 글로벌 금융부채의 총액은 세계 GDP의 263%에 지나지 않았으나 위기가 시작하기 전인 2007년에는 355%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연 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그 후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비율은 2012 연말 현재 312%로 하락하였다(<그림 3> 참조).

이처럼 위기 이전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은 경제 성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반면에 (Rodrik, 2008; Rodrik and Subramanian, 2008; Jeanne et al., 2012) 소득과 부의 분배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Stiglitz, 2012). 이 뿐만 아니라 세계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으며 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위기를 세계 각국으로 전이시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그 후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Lane, 2012).

<그림 3> Financial debt/GDP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2013.

성장과 관련하여 볼 때, 세계금융시스템의 규모는 이미 최적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금융-실물 부문간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는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의 고용이 전체의 3.2%이상, 혹은 부가가치가 6.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OECD 16개국의 최근 통계를 분석해 보면, 금융부문의 고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Cecchetti, 2012; Cecchetti and Kharroubi, 2012).¹⁾ 한국의 경우 이미 2005년에 동일 비율이 3.3%와 8.4%를 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모든 부문에서 “deleveraging”으로 부채를 축소하여야만 실물경제와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 축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위축되는 등 금융세계화는 상당 기간의 수축기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일차적인 원인은 소수의 대형 국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선·후진국을 모두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거대한 업무망을 이용하여 수익을 찾아 수시로 대규모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국가 간 자본 이동의 규모와 변동성을 증폭시켜 한나라의 위기가 다른 경제로 파급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1) 숙련 노동자들이 금융 부문으로 흡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더구나 국제금융은 감독이 미흡한 허점을 이용하여 대형 금융기관들이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수많은 파생상품을 창출하여 단기로 조달한 자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등 투기에 몰입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여 위기 이전에 이미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이 금융위기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으나 국가 간 긴밀한 정책협조의 부재로 대규모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위기가 시작되자 금융이 마비되어 경제가 크게 위축 된 것이다. 세계경제는 아직도 위기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²⁾

3) 세계경제 지배구조의 취약성

앞 절에서 지적한 세계화 후퇴의 원인들은, WTO 회원국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선진국과 신흥경제들이 협력하여 국제적인 금융 감독체제를 강화하였다면 보호무역의 확산을 억제하고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위기의 부작용을 크게 축소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가 수립되어 있었더라면 세계경제 통합은 좀 더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주체 즉 세계정부(Global Government)를 상정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은 무역, 금융 및 거시경제 운영 등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국가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공공재(Public goods)를 생산할 수 있는 규범과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국제적인 협력 체제, 즉 세계경제 의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집단행동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계경제 지배구조의 변천 과정을 보면 2차 대전 이후 1973 Bretton Woods 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군림하면서 지배구조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역할을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G-7의 집단 지배구조가 탄생하였다.

그 후 러시아가 참여하여 G-7은 G-8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결성되었으나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중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시장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선진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G-8을 확대하여 신흥시장 경제를 포함하는 지배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러한 개편의 시급성이 표면화됨에 따라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새로운 지배구조를 설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Krugman("Hot Money Bleeds", *New York Times*, 2013.3.24.)에 따르면 금융자유화가 새로운 추세로 정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을 포함 20여개 경제가 금융위기에 휘말렸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2차 대전 이후 1970년 말까지 30년 이상의 기간 중에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본이동의 규제와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방패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로존 위기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통합은 궁극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인 통합의 정도에 따라 그 깊이와 폭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유로존 회원국들은 정치적인 통합의 일환으로서 재정 및 금융감독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주권마저 포기할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범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유로존의 개혁에 상응하는 재정이나 금융 감독의 통합은 상상할 수도 없다. 결국 정치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국가 간 정치적인 협의·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구축 강화 해야만 경제의 세계화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새로운 지배구조로서 G-20은 커다란 기대 속에서 출범하였으나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아직은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세계 금융 감독체제 강화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그 역할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는 등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장래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3. 세계화의 전망

1) 무역자유화

선·후진국 모두 한결같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단 누가 어느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의 협상을 시작하면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여 협상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도하라운드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도하라운드도 신흥국의 공산품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의 시장개방이 이행되지 않는 한 그들의 농업보호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신흥국들은 도하라운드도 후진국 개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산품 시장 개방 요구는 개발라운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도하라운드 협상의 재개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RTA의 통합 가능성에 따라 그 추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앞으로도 선진국·신흥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하라운드는 실패로 끝날 것이며 WTO는 그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RTA의 통합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미국은 도하라운드의 타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추진체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두 RTA 외에도 ASEAN+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는 2012년 11월 역내무역 자유화를 위한 역내포괄적동반자 협정(RCEP)의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에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은 1994년의 보고를 선언 이후 아·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구축방

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이들 복수 국가가 참여하는 RTA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WTO 체제는 개편되거나 새로운 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FTAAP나 RCEP의 목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달성될 가능성이 희박한 선언적인 계획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친미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물리적인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가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지는 분명치 않다.

바로 이러한 실효성의 의문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견제를 지양하여 EU, 그리고 친미적 아시아 국가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립하여 이 질서 속에서 중국의 팽창을 수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와 TAFTA는 바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미국은 TPP와 TAFTA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아무리 협상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두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난관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두 FTA의 결성을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TPP와 TAFTA의 설립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도하 혹은 새로운 라운드를 통한 WTO 체제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실사 TPP와 TAFTA의 협상이 예상대로 진행되어 두 개의 거대한 FTA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참여하지 않고 이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 한 새로운 질서는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중국도 미국과 경쟁을 벌여 새로운 FTA를 결성하고 있는데 그 수가 2012년 현재 10개에 달하고 있고, 이미 7개 국가/지역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미·중간의 경쟁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어려우나, 중국을 배제하는 TPP는 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FTA로서의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무역관련 국제협력 질서는 미국, EU, 중국 그리고 다자간무역 자유화를 지원해온 신흥시장 경제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미국이 TPP와 TAFTA 협상을 중단할지도, 중국이 새로운 FTA 결성을 포기할지도, 두 경제대국이 협력하여 RTA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윤곽이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불확실성의 와중에서 보호 무역이 재연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금융의 세계화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역사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발생한

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금융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세계 금융시스템도 여러 시장보완적인 제도로 뒷받침 되어야만 금융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완화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국제금융 시스템도 국제적인 예금자보호제도,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부실금융 기관 퇴출제도,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감독기구가 설립되어야만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범세계적인 기구는 세계적인 정치통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설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제한된 범위내의 최종대부자로서 세계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경제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더 이상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세계경제는 주요국가의 통화신용 정책을 조정하며 국제적인 금융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주체 없이 표류해 왔다.

현재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감독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금융 건전성 감독의 주축이 되고 있는 Basel III는 신흥국들에게는 불리한 차별성이 있으며 선진국들도 이행을 유보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³⁾ FSB의 활동과는 별개로, EU, 미국, 영국 등은 독자적인 감독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국제적인 금융감독은 통합되고 있기보다는 분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각국의 정치권을 포획(capture)하여 금융개혁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그나마 취약한 세계적인 금융의 지배구조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⁴⁾

결국 효율적인 세계 감독체계를 형성할 수 없다면, 선·후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본이동의 통제 등 자본계정의 규제를 강화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여러 신흥시장 경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규제 수단이 도입되고 있다. 자본규제의 효과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들의 확산은 부분적으로나마 금융세계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감독은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통화 신용정책을 포함하는 거시정책의 조정과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국제금융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적인 거시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G-20은 IMF의 지원을 받아 상호평가 프로세스(Mutual Assessment Process)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기대하였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Park

3) Sheng(2013)과 Tom Braithwaite("Enforcement of Basel III should be focus", Financial Times, October 1, 2012.) 참조.

4) Paul Krugman("Treasure Island Trauma", New York Times, 2013.3.21.)은 금융위기의 극심한 피해를 경험했으면서도, 지난 5년 동안 은행 개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여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위기 전과 비교하여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and Wyplosz, 2012). 과거의 EU 와 G-7 의 경험을 보면 유사한 정책공조는 이행 구속력이 없어 전부 실패로 끝났다. G-20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선진국 · 신흥국 간의 정책공조에 한계가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 G-20 지배구조의 한계와 G-3 등장 가능성

G-20 체제는 회원국 간 정책공조의 기반을 강화하여 2008년 금융위기를 조기에 진화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G-20은 경기활성화는 물론,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 범세계적인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후진국 경제개발 등 구조적인 과제도 다루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개혁 과제들이 의제로 등장하면서 G-20은 지배구조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즉, G-20 회원국들이 장기적인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를 보기도 어렵지만, 합의에 이를 경우에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G-20도 G-7이나 EU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구라기보다는 하나의 국제적인 논의기구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G-20은 정책적인 합의 기구로서는 회원국들의 경제적인 배경이나 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격차뿐만 아니라, 회원 수가 너무 많은 반면, 대다수의 신흥시장 경제와 후진국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세계적인 지배구조로서의 대표성과 합법성(legitimacy)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G-20 내에서도 미국, 중국, 그리고 EU는 그들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미국, EU, 중국이 다른 신흥국들과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 G-20을 새로운 지배구조로 발전시킬 별다른 동기나 유인을 찾지 못할 것이다.

G-7 회원국들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만일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해야 한다면 G-20 내에서 G-7은 G-3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즉, 미국과,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4국은 EU 회원국들이므로, 미국이 일본과 캐나다를 대변하는 경우 G-7은 미국, EU, 중국으로 구성되는 G-3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만일 G-3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G-20은 좀 더 효율적이며 강력한 지배구조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2중 구조는 인도, 러시아 등 BRICs 국가들을 포함하는 신흥국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므로 새로운 지배구조로서 G-20의 장래는 그리 낙관적일 수 없다(Park and Wyplosz, 2012).

4) 장기적 전망

앞으로 2~3년을 전망해 볼 때 경제 세계화는 후퇴하거나 정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화의 정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단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면 경제 통합은 그 엔진이 다시 가동되어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보호무역의 큰 피해자는 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후진국의 개방을 확대하여 세계화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구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러한 압력은 보호무역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7,000여개에 불과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2006년에는 78,000개로 열 배 이상 증가했다(McCann, 2009). 2009년에는 89,000개로 늘어났는데 이들의 제후업체는 90만개에 달한다(UNCTAD, 2010). 이들 다국적 기업은 도처에 생산 Network를 구축하여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면서 생산기반과 판매망을 넓혀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2011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총 수출의 33%,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며 6,9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UNCTAD, 2012).

다국적 기업은 경제 세계화의 산물이며 세계화의 주역으로 성장해왔다. 일반기업들도 IT 기술의 혁신과 생산기술, 특히 노동 절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대형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이 변하고 있다. 즉,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외국시장으로 진출하지 않는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대형금융기관은 대마불사의 이득을 겨냥하여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IT 기술과 전산처리 기술의 혁신으로 대형, 소형 모두 자산과 부채를 확대·다양화 해야만 금융기관들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는 현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Hughes and Mester, 2011).

앞으로 다국적 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은 세계 경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개방과 세계경제의 지배구조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선·후진국 모두 이러한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금융개방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영·미 국가들이 금융세계화의 후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형은행들은 자본건전화를 위한 국제적인 금융규제(Basel III)는 물론 국내금융 개혁마저 거부하거나 피해가고 있어 위기 전과 비교하여 볼 때 행태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글로벌 금융감독의 강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글로벌 금융의 취약성은 그대로 남게 된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 금융기관의 경기 순응적이며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자산운영이 되살아나 금융시장은 절도를 상실하게 되어 금융의 과열-과열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결국 세계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드세지는 등, 경제통합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 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경제는 금융위기가 연속되는 시련을 겪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들을 가릴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정치의 우선순위와 자국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한 국제적인 금융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세계화되고 있으나 정치는 국내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지속되는 한 세계경제는 과열·냉각이 반복되는 비

연속성의 세계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세계화의 앞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금융의 구조적 불안정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금융세계화에 대한 회의와 저항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다자간 무역자유화 또한 중단되거나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WTO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나, WTO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체제가 수립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G-20의 역할이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막연한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4. 한국의 선택

1) 국제적인 협력

경제세계화의 장래가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여야만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차단하여 전환기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세계경제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하게 되는 시기에는 강대국 간에 정치적·경제적 지배 영역을 확대하려는 각축전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현재의 다극체제 정치구도에서 경쟁은 더 격화되어 한국과 같은 중진국 경제들은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기도 중립을 고수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정 강대국과의 연합은 강대국들 간의 세력구도의 변화에 따라 자기 보호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뒤따른다. 만일 모든 강대국들과 등거리를 유지하여 중립을 지키려한다면 모든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고립을 자초할 뿐 아니라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찾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도외시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이 안보의 초석이 되고 있고 이러한 파트너 관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의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중국, EU 등이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대외경제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은 한국 총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으로서 중국과는 양자 간 협력의 여유 공간을 확대하고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상호견제와 군사적인 경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면서 안보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한미동맹이 한중경제 협력 영역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중국이 무역면의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양보를 강요할 경우 전략적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중국과의 FTA 그리고 CJK FTA 협상에서 좀 더 명백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TPP가 중국 영향력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Wen, 2012) 중국의 우려나 입장을 무시할 수 없

다. 즉, 한국은 미중간의 갈등과 경쟁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TPP는 중국의 경제적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여 미국과 중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국의 전략은 무역과 경제협력의 다변화에 따라 미국과의 안보·경제 동맹을 강화하되 이와 병행하여 기존 국제협력체와 국제기구의 큰 틀 속에서 다자간 무역체제, 국제금융제도, 세계경제 지배구조의 개혁 등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여 독자적인 행동반경을 넓혀감으로서 관련국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G-20으로부터 시작하여, ASEAN+3, APEC 등의 다자간 협조체제와 WTO, IMF, FSB 등의 여러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러한 국제기구가 정하는 규범과 규정에 준하여 중국, EU 및 다른 교역 대상국들과 양자간·다자간 논의와 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역할이 특정 국가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경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TPP와 TAFTA도 G-20와 WTO 체제 내에서 그 현실성과 수용 방안을 논의하며, TPP의 참여 문제도 ASEAN+3 회원국들과 의견을 모아 현재 TPP의 목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일 한국이 국제협력체나 기구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려면 경제정책, 특히 대외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보완하여 중상주의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FTA, 중국, 일본과의 3자간 FTA, 그리고 RCEP과 FTAAP 등의 다자간 RTA협상에 참여하고 있어 그 어느 동아시아 국가 못지않게 RTA 설립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어느 단계에 가서는 TPP에도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 RTA 협상에 참여하다 보면 한국의 협상 전략이나 조건이 RTA마다 다를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편차는 불가피하겠으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한국은 궁극적으로 RTA를 통합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참여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목적을 분명해야만 여러 협상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국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좀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볼 때 현 단계에서 무역자유화를 되돌리는 정책은 상상할 수 없으나 금융개방은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은 격변기를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구조와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전환기에 대폭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국제금융의 구조가 가시화되는 단계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관리, 자본통제, 자본계정 및 무역과 관련된 규제 등은 교역 대상국의 경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외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교역대상국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

2)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위한 협력

국제협력체와 기구에 참여하는 목적은 국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회생을 감수할 준비도 돼 있어야만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들과 공조는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세계적인 공공재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력은 없다. 만일 제한된 국력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 여러 분야에서 ASEAN+3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 생산을 주도하여 동아시아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지역적인 선택이 좀 더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2000년 새로운 지역협력기구로 출범한 ASEAN+3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의 통합에 기여하였으나 회원국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이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당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지역협력기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ASEAN+3는 설립 초기단계부터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통합의 주체로서 난항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이 영토분쟁에 휘말리면서 앞으로의 지역차원의 협력과 정책조정 전망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ASEAN+3는 지역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로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의 정책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인민폐가 새로운 지역통화로 부상하면서 이제는 인민폐 블록(RMB Bloc)의 형성마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인민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ark and Song, 2011).

한국과 일본은 인민폐 블록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동아시아에서 인민폐의 사용이 확산되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블록이 형성되는 경우 ASEAN+3는 사실상 지역기구로서의 당위성을 상실하게 된다.

중국, 일본과 한국은 2012년 말 삼국의 CJK FTA 협상을 어렵게 시작하였으나 영토분쟁이 격화되면서 협상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ASEAN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네이는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긍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만일 한국과 일본이 TPP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로는 중국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CJK FTA 협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과제에 있어서조차도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일본은 양적완화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여 엔·달러 환율은 지난

11월과 비교하여 무려 20%나 그 평가가 절하되었다. 엔의 하락으로 일본과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 한국, 그리고 다른 ASEAN 회원국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만일 엔의 하락이 계속되면 화폐전쟁(Currency War)이 촉발되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이처럼 지역적인 안정을 저해하고 정치적인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은 물론 ASEAN+3 회원국들은 영토분쟁에 휩싸여 정책조정의 큰 틀의 구조마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다른 회원국들과는 영토 문제나 안보와 관련된 별다른 현안이 없다. 따라서 그 어느 회원국보다도 회원 간 중재자 역할을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국은 회원국 간의 정책적인 타협을 유도·지원 하여 ASEAN+3 무기력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예를 들면 인민폐의 국제화와 엔의 평가절하는 ASEAN+3 당면 과제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대응방안의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도 ASEAN+3 전체 FTA 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임을 강조하여 동남아 국가들과의 마찰을 피해 가는 ASEAN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역할은 동아시아의 공공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이에 따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회원국들의 신뢰를 얻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무엇일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적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없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으며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이상 한국은 일정 분야에서 ASEAN+3 회원국 간의 생산공조 체제의 구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아시아 환경보호 센터, 아시아 전염병 통제 센터, 아시아 식품의약품 안전청, 아시아 표준 연구 제정 센터 등의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적으로 화려하지도 않으며 인기도 없고 타국의 협조도 용이하지 않은 반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작으로부터 중국·일본과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의 신뢰를 쌓아 간다면 한국은 ASEAN+3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점차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인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기술의 진보는 경제활동의 시간과 공간을 계속 압축하고 있다. 이러한 압축이 바로 경제세계화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정보통신, 전산처리 및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다국적 기업의 생산망과 역할이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 기업의 국제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대규모 글로벌 금융기관도 다시 위기 이전

의 기력을 되찾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글로벌 온라인 시장은 세계의 소비자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있어 생산, 투자, 소비 등 여러 측면에서 개별 국가의 경제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신흥국 어디서나 국내 정치는 세계화의 편익과 폐해에 따른 내부적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여 경제의 문을 닫으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가 하면 세계의 정치구도는 다극 체제로 변하면서 현재 그 어느 특정 국가도 세계 경제의 지배구조를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다. G-20과 같이 이질적인 경제로 구성된 집단적인 지배구조가 국가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여 새로운 체제로 정착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지배구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세계화를 밀고 가는 시장의 힘과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의 대립은 끊이지 않으면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통합은 부침을 계속할 것이다.

세계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한국은 자기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독자적인 행동반경을 넓혀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현존 글로벌 지배구조 틀 속에서 국제적인 공공재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국은 세계경제의 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는 일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다른 경쟁국들보다 기술개발에 앞서가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규모를 늘려가는 등 재정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도 매년 2~2.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 예상되는데, 한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어 성장률이 3%대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국내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제 문제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마저 상실하게 되어 세계화로부터 낙오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aldwin Richard and Low Patrick (2009),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cchetti, Stephen G. (2012), "Is Globalization Great?," BIS Papers No. 69, 1-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ecember.
- Cecchetti, Stephen G. and Enisse Kharroubi (2012), "Reassessing the Impact of Finance on Growth," BIS Working Papers No. 381,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July.
- Cho, Sungjoon (2010), "The Demise of Development in the Doha Round Negotiations,"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1.
- Gregory, Rob. Christian Henn. Brad McDonald, and Mika Saito (2010), "Trade and the Crisis: Protect or Recover," IMF Staff Position Note, April 16, 2010.
- Hughes, Joseph P., and Loretta J Mester (2011), "Who Said Large Banks don't Experience Scale Economies? Evidence from a Risk-return-driven Cost Function," Working Paper No. 11-27. Philadelphia: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July.

- Jeanne, Olivier. Arvind, Subramanian and John, Williamson (2012), "Who Needs to Open the Capital Accou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Lane, Philip R. (2012), "Financial Globalization and the Crisis," BIS Working Paper No. 397,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ecember.
- McCann, P. (2009), "Globalisation, Multinationals and the BRIICS," in OECD, Globalisation and Emerging Economies: 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and South Africa, OECD Publishing.
- Park, Yung Chul and Charles Wyplosz (2012),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A Critical Appraisal of some Proposals," ADBI Working Paper 364,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Park, Yung Chul and Song, Chi Young (2011), "Prospects for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ADBI Working Paper No. 314,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Rodrik, Dani. and Arvind, Subramanian (2008), "Why did Financial Globalization Disappoint?," IMF Staff Papers, Volume 56, Number 1, March 2009, 112–138.
- Rodrik, Dani (2008), "One Economics and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ng Andrew (2013),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Growth: Implementation of Basel III in Asia. Fung Global Institute.
- Stiglitz, Joseph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 UNCTAD secretariat and JETRO (2012), International Trade After the Economic Crisis: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 UNCTAD (2010), "World Investment Report: Investing in a Low-carbon Econom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 Wen, Jin Yuan (2012),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China's Corresponding Strategies," A Freeman Briefing Repor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